

이재명 “코스피 5000 시대” 공약…대한민국 경제 다시 된다

자본시장 구조 개혁·경제 체질 개선 중심 민생경제 회복 기대감
상법 개정 본격화·기업 구조 투명성 강화·주가조작 근절 등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코스피 5000 시대’ 달성을 공약으로 약속하면서, 자본시장 구조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민생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2~3주 내에 처리를 약속한 상법 개정안과 더불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주가조작 근절 등 실현 가능한 제도 개선과 함께 투자자 신뢰 회복을 전면에 내세움에 따라 침체한 국내 증시와 경제 전반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성남시 주민 교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취임 즉시 대통령 직속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내수 부양 및 산업 혁신, 주식시장 활성화 등 전방위 경제 대책을 추진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경제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개혁도 실효를 얻을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경제 부양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는 단연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확보,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코

스피5000시대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같은 공약이 발표되자 미래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등 주요 증권주들이 지난달 말 기준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KRX 증권지수도 5월 30일 기준 40% 이상 상승하는 등 시장의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 주가 부양이 아닌, 제도 개선을 통한 장기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경제 관련 공약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남북 분단, 지배구조 불투명, 낮은 배당성향 등으로 인해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 등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활성화하는 등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공매도 제도 개선과 상장요건 완화 등 자본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단기 차익 실현 등에 대한 한수조치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주가 조작,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약이다. 더불어 상장회사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해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관련 공약은 자본시장 공정성·투명성 개혁 및 민생 경제 회복을 위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거 운동에 나선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서초구·강남구 유세에서 ‘코스피 5000 시대’를 들어 보이며 경제회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방안으로, 지난달 말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유권자 54%가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이 실현 가능한 방향”이라고 답했을 정도로 개혁 및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역경제 도약의 기회로” 광주·전남 경제제, 새 정부 공약 실현 기대

광주, 금타 화재·복합쇼핑몰 교통난 해결…전남, 침체한 여수산단 활성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라 침체한 광주·전남지역 경제계에도 회생을 기대하는 희망의 꽃이 피어나고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와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 등이 이번 대선 기간 제안했던 지역 대표 경제공약들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거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 광천동 인근 복합쇼핑몰 교통난 해소와 금호타이어 화재 수습, 전남 신재성 에너지 벨트 구축, 여수 산업단지 활성화 등 지역 경제 현안 해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광주·전남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1번 공약은 ‘경제 강국’으로, 지역 경제계에서 줄곧 요구해 온 산업 정책과 맞닿아 있다.

광주경총은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10대 공약’을 건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확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사업 확대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확대 ▲출산 장려를 위한 중소기업 임직원 간접세 감면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등이다.

광주상의 역시 국가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공약 16건을 발굴·제시했다. 최우선 과제로는 광주 민간·군 공항의 조속한 이전과 서남권 관문 공항 건설이 건의했으며, ▲서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조기 착공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했다.

또 노동·세제 관련 제안으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 및 농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중심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 개선 ▲주 52시간제 탄력적 운영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

화 및 한도 상향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표준 조정 ▲법인세율 OECD 평균 수준 인하 등을 건의했다.

광주 경제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역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사업들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형 복합쇼핑몰 등이 들어서는 광주시 광천동 인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2호선 광천선 지선 건설과 심각한 화재 피해를 입은 금호타이어 관련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을 바라는 목소리도 크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대선 기간동안 광주를 AI 도시로, 전남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 벨트로 조성하기로 하는 등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공약을 약속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지역 발전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균형발전 시대가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은행권,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 진출” 요청키로

비금융업 확대·신탁제도 개선·제재시효 제도 등도 요구

은행권이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을 넓혀주고 투자일임업·신탁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은행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제재 시효를 정해달라는 의견도 함께 전달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 전략 담당 부행장급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서 은행들은 현재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 가상자산업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주장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커스터디(디지털자산 관리·보관)와 같은 수탁업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로 진출하기를 원하지만, 현행법상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가 없다”며 “거래소 매매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수탁이나 지갑 형태의 생태계로 확장하기 위해서도 은행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요청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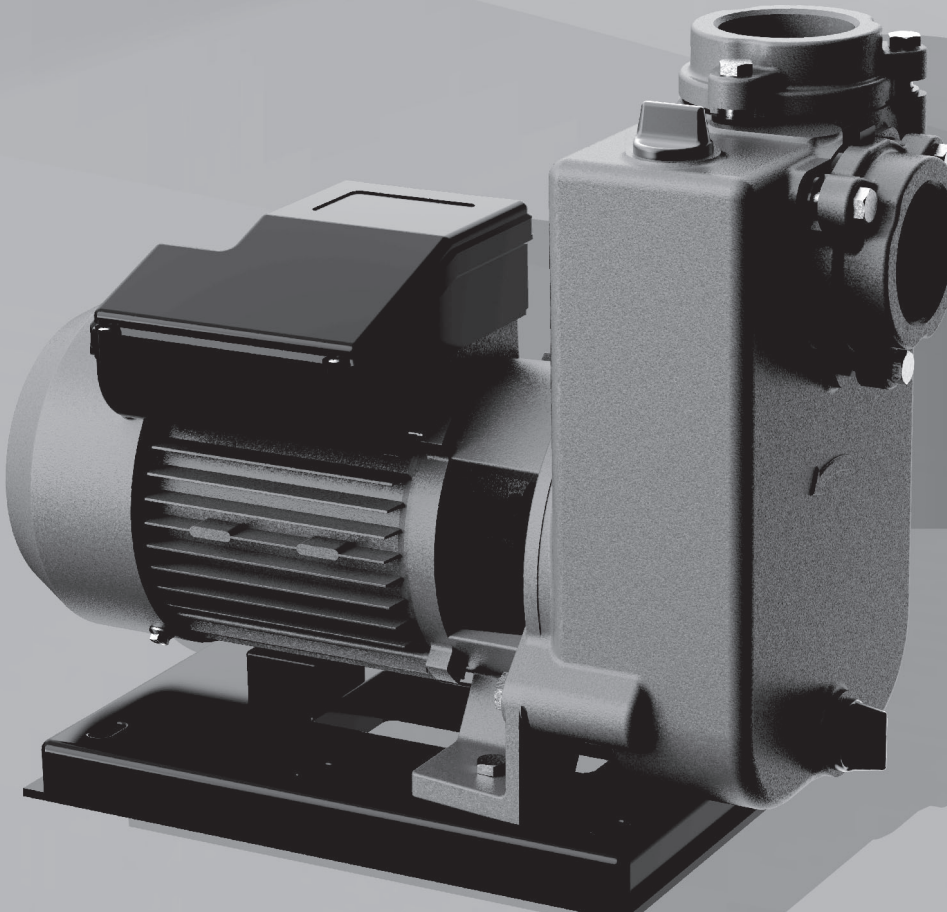
은행의 속원인 비금융업 전면 허용도 주요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그동안 은행권은 빅테크(대형IT기업)의 경우 완화적 제도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금융·비금융을 융합한 혁신 서비스를 시도하고 있지만, 은행은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로 다른 산업 진출이 사실상 금지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은행권은 보고서에서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유통·운수·여행·ICT(정보통신기술) 등 비금융 사업을 은행 부수 업무로 폭넓게 허용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본연의 금융업 측면에서도 선진 금융서비스를 자유롭게 개발·제공할 수 있도록 다른 업권과의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달라는 주장이 포함됐다.

은행권은 “질 높은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위해 미국·캐나다처럼 은행 투자일임업을 허용해 주거나, 전면 허용이 어렵다면 공모펀드만이라도 은행 투자일임업 대상으로 정해달라”며 “신탁 제도 역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와 신탁 관련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